

#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입법 시계 돌아간다

**행정통합특별법안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서 ‘불수용 특례 재요구’ 반영 미진  
총리 “지선 전 통합, 이달내 통과 못하면 불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위원장 윤경, 이하 법안소위)’는 11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를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소위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다룬 5개 법안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심사를 벌인 끝에 위원회 대안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담았다.

5개 법안은 △광주전남조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해인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른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이다.

이를 동안의 법안소위 심사에서 소위 위

원인 여야 의원들은 행정통합특별법에 지방 재정 확충방안, 중앙 정부의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조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해마다 5조 원의 특별 재정을 통합지역에 부여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

부터 행안부는 “정부가 가동 중인 지방재정 확충을 더우기 테스크포스(TF)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난색을 표명하면서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각 지역별 발전방안을 담은 특례조항들도 상당수가 원안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윤경연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두 번째

정책회가 이뤄진 오후 5시 30분께 기자들이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의 주요 쟁점을 묻자 “예비타당 면제 부분 관련된 것,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어디까지

들 것이냐. 그런 것들이었다”며 “광주전남

의 경우에는 절충점을 찾기도 하고, 절충점이 안 찾아지는 부분은 양론 그대로 두면서 의견을 다시 모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서 정부 부처가 불수용을 밝힌 100여개 특례에 대한 결론을 문자 “불수용된 특례 가운데 일부는 조율이 이뤄졌고, 일부는 정부가 수정 의견을 내 다시 받은 것도 있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지방의 입장이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선 가장 눈의가 진전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부터 상정해 심사에 속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우선 정리한 뒤 이를 기준으로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차례로 심사에 매진했다.

광역행정통합에 성공해 오는 6월 3일 지

방선거에서 행정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답변했다.

신경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해 총리실·정부·국회가 함께하는 TF 발족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분권과 균형의 원칙을 세우고, 시·군 자치구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 강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통합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 속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만여 협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 관련 법안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경우 첫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이 대통령, 오늘 정청래-장동혁 초청 청와대서 오찬 회동

강훈식 비서실장 “민생회복·국정안정 초당적 협력방안 논의”



이제명 대통령(사진)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번 오찬은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



또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찬 테이블에는 국정 현안인 미국과의 관세협상, 광역행정통합, 설 물가안정 방안 등이 올려질 전망이다.

야당이 주장해 온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논의될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과 정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강 실장은 그러나 “합당과 관련한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 양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내 일자는 어디에… 11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드림 만남의 날’ 행사를 찾은 구직희망자들이 취업 상담 및 면접을 받고 있다.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杵를 비롯, 공공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261개 드림터가 참여하여 최종 선발된 청년은 3월 3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을 쌓게 된다.

최명수 도의원 “지방도·하천 정비 예산 증액 시급”

사업 지연 시 안전사고·재해 위험 기증 등 우려

순천대·목포대, 통합 국립의대 신설 본격 추진

의대정원 100명…2030년 개교 목표



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사 장기화는 곧 도로 이용 불편은 물론, 교통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

상교량을 포함한 주요 노선의 경우 공정지연이 누적되면 유지관리 비용까지 증가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하천 정비 예산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도내 지방하천을 체계적

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9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921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편성 규모로는 추진 중인 공

사의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가 통합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순천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없는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정원이 2030년 개교를 전제하에 1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의과대학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대도 이날 환영문을 통해 “도서·농어촌 지역이 오랜 기간 겪어온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접근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형 공공의료 인재 양성체계’ 구축

두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기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서남권과 동부권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의료 교육·연구·수련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는 방침이다.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인력 의료인력

을 양성하고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이번 결정은 대학의 노력뿐 아니라 여러 주체가 한뜻으로 협력해 온 결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준비를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우수한 교육 시설과 교수진을 빠르게 확보해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

### ▶1면 ‘광주·전남’서 계속

이와 함께 광주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전도 제시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인프라가 집적된 AI 데이터 실증도시로서, 데이터 정책 실증과 산업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기정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옮기는 문제가 아닌, 광주·전남의 가치시승을 완성할 결정적 승부 수가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함께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을 선택했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통합 이후 대비할 제도적 장치로 준

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 최대의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등 농생명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

어서 관련 기관 집적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재생 에너지 잠재력 역시 전국 1위로 도 전역이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수는 석유화학단지와 광양 제철소 등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지역 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외에도 정부가 통합 특별시의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한 만큼 30개 기관을 추가해 총 40개 기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